

새정부와 석유산업

## 석유위기 대책 절실

소비지정제주의 원칙 확립되어야

글·배 병 휴 | 월간 경제풍월 발행인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바뀌고 위기 마저 압박 잇고 지내는 느낌이다.

유난히 추운 올 겨울, 국제 석유시장이 지극히 불안하고 원유값이 정신없이 오르는데도 두려운 기색이 별로 없다. '우리도 잘살아 보자'면서 경제개발에 매달리고 있을 때 국제유가가 오를 때면 온 나라가 벌벌 떨었었다.

그러나 지금 석유위기를 실감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

국내 석유산업이 어렵다고 지적해 봐야 '업자의 우는 소리' 이거니 치부하며 끝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때마침 새해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제 석유시장의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국내 석유산업이 어디로 가야하고 정부의 석유정책은 어떻게 손질해야 할 것인가를 새삼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 석유 동향에 산업계 떨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는 달리 석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계는 연일 비정상하게 보도되는 석유정세에 매우 민감하다.

석유값 변화가 산업 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유가가 배럴당 1달러만 올라도 정유회사들은 적어도 3백억원의 추가손실이 발생한다고 겁을 먹고 있다.

해운사들도 수송비 인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1달러 인상에 최소 1백 50억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한다고 계산한다. 항공업계는 기름값 인상이 피나는 요금경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

이라면서 초긴장 상태이다.

무역업계는 원유값 1달러 인상이 7억5천만달러의 무역수지적자를 가져온다고 계산한다. 소비자 물가도 0.15% 포인트 가량 오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무역상사들의 눈과 귀는 중동지역으로 쏠리고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산유국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잠시도 놓치지 않으려 애쓰고 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석유노조 파업도 예민한 관측의 대상이다. 파업 장기화로 생산이 감소하는 것은 바로 국제유가의 인상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토록 산업계가 좌불안석인데 비해 시중의 분위기는 판판이다. '석유 공급이 무슨 걱정이나'는 느낌처럼 태평이다. 왜 이렇게 세상과 인심이 비졌을까.

지난 1973년 이후 석유위기를 겪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정유업계가 경영상 애로가 많다면서도 공급차질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 최악이 오기 전에 위기대책

석유업계가 가장 먼저 불안에 떨며 긴급대책에 분주한 것은 당연하다. SK(주)를 비롯하여 LG-칼텍스정유, 인천정유, S-Oil, 현대오일뱅크 등 5개 정유회사들은 원유의 안정적 확보와 가격안정에 온갖 비상수단을 모색하고 있다.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해외로 전문요원을 파견하고 장기적으로는 자주적인 개발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투자를 서두르고 있다. 행여 이라크 사태가 악화되면 배럴당 40달러를 넘고 70달러나 그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이라크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난다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만약 장기화한다면 석유업계가 손 쓸 방도가 거의 없다.

수입선을 서부 아프리카와 북해 및 남미 등지로 확대한다지만 하루 아침에 가능한 것이 아니다. 자주개발 원유를 도입하는 것은 더욱 먼 길이다.

이 때문에 어느 산업분야 보다도 석유업계가 새정부에 요망하고 싶은 말이 많은 편이다. 석유위기 대책은 빠를수록 좋고 강력할수록 뒤탈이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만약 해외요인이 잘못되어 석유공급이 원활치 못하고 판매가격이 급등하면 1차적으로 석유업계가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책을 인수하는 과정에 석유산업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기를 요망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단계별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급차질이 나타나면 비축유를 방출하고 수입관세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수급조절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가격과 판매를 통제하고 제한하는 사태가 빚어졌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책임을 따지려 해봤자 소용이 없다.

어떻게 하던가 미리 위기대책을 마련하여 석유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최선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원유와 제품간 관세 차등화

뜻밖에도 국내 석유업계는 경영상태가 갈수록 어렵다고 호소한다. 외형이 늘어나고 투자도 늘리고 있지만 매년 막대한 경영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시장개방 이후 판매경쟁이 심화되어 마진이 줄어들고 있는데다 과잉설비에 비해 소비 증가율은 둔화되고 금융비용은 무거워 지고 있다.

무엇보다 시장개방으로 수입품과 국내 정제유의 공정한 가격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된다.

이는 원유수입과 제품 수입시의 관세율 격차가 고작 2% 포인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수입 유류의 시장 점유율이 이미 7%를 넘어선 것이 저 관세율 격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래서 석유업계는 이번 기회에 소비지정제주의 원칙을 분명하게 확립해야만 국내 산업이 안정되고 석유위기에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지정제주의란 완제품을 수입하여 공급하기 보다 원유를 들여와 국내에서 정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석유에너지의 특성상 비상시에 대비하면서 국내물가를 안정시키고 무역 수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자국에서 정제하는 소비지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같은 이유이다.

이를 위해서는 원유와 제품간의 관세 차등화 폭을 현재보다 확대해야만 한다. 때마침 국제 석유 정세가 불안할 때 이 같은 방침을 확고히 설정하는 것이 업계에게 안정공급 책임을 지우고 연관산업에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환경개선 투자 인센티브 도입

석유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해서도 새정부가 인식을 새롭게 가져야 할 과제이다.

환경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수조원대의 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환경대책을 일방적인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특히 석유업계가 경영적자라고 울상인데 환경투자를 강요만 하면 어떤 결과를 빚을 것인가.

업계는 환경개선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 수익이 보장되고 투자여력이 축적돼야 하기 때문이다.

새정부 인수팀에서는 환경세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연료의 생산, 소비, 개발사업에 따라 친환경성 수준을 검토하여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자원 순환성 사회건설'을 위한 방침이라고 소개되었다.

그러나 환경세의 도입원칙은 좋다고 해도 유관업계와 전문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함은 물론이다. 석유업계의 경우 경영적자가 해소되지 않고는 어떤 명분으로도 환경개선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실정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자주개발 원유를 늘려야 한다

석유산업이 수많은 연관산업에 직간접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장기

적이고 안정적으로 석유산업 발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정책과제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자주개발 원유의 확보이다. 국내에 부족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해외에 나가 개발원유를 확보한다는 것은 비축원유를 늘린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에도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유가 있지만 정부가 48일분, 민간이 53일분을 비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외에서의 자주개발 원유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이다.

그동안 석유공사와 석유업계가 개발수입에 상당한 투자를 했었지만 개발자금도는 고작 2%에 불과하다.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15%를 개발 수입으로 공급하고 있다.

우리의 자주개발 목표도 최고 20% 수준까지 높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된다.

자주개발에 의한 석유자금도를 높인다는 것은 국제 석유위기에 대응한다는 의미이며 물가안정과 연관산업에의 에너지 공급안정을 뜻한다.

그러나 개발수입은 막대한 규모와 장기간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석유업계의 수익성 보장이 이를 위해서도 시급하다는 결론이다.

또한 개발수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안정화 기금 등 공익자금의 지원도 대폭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의 유망한 유전은 많이 물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피 해안에서는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새정부의 석유정책에서는 이 같은 긴급 현안과제를 혁신적인 안목으로 채택하여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석유위기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추도록 요망한다.

### 소비자와 대화폭을 넓여야

한편 석유업계는 소비자의 신뢰를 보다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일반 소비자들은 석유회사들의 경영적자를 비롯한 애로사항을 경청하려 하지 않는다. 수입품과 국내 정제품 간의 경쟁이 어렵다는 사실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하다고 동의한다.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소비자가 환경개선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이다.

업계는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로 해결코자 노력해야 한다고 믿는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석유산업의 애로를 풀어 주려해도 소비자 단체가 거부하면 실행되기 어려운 시절이다.

특히 새정부 인수팀에는 노동계와 NGO 출신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아마도 규제는 강화되고 경쟁질서는 더욱 냉혹해 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석유업계는 숨김없이 소비자와 대화의 기회를 늘리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석유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끈질기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성을 강화하면 정부도 더 이상 업계의 어려움을 덮어두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위기 앞에 국내업계가 독자적으로 대응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만 정부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고 권고하는 것이다. 🍀